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보는 경제 민주화

2013.03.18 | 김병권_ 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만약 국가 통치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기업 통치에서도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종업원들은 대체로 주주만큼은 자신들의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아마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이다.

달라진 것 없는 2013년 주주총회

지난 3월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111개 상장사와 39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통상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다. 여기는 철저히 1원 1표의 돈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일터이자 하루 대부분 생활의 공간인 기업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여기에서 이뤄지며 종업원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 역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6%라는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언론 표현을 빌면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한다. 이사 선임을 승인했고 이사들의 보수한도(개별 이사가 아니라 전체의 보수한도)를 승인했다고 한다. 경제 민주화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사회적 책임(CSR)위원회를 두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협력사들과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지속 시키겠다는 발표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밖에서는 삼성백혈병 직업병피해 가족, 삼성 해고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치러진 주주총회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의하고 기구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취지를 시작부터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지분을 7.2%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현대차와 LG전자 등 약 180여 기업에 지분을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눈에 띄는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이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자본시장에서 개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한 국가의 시민으로써 직업과 빈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유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정치사회와, 주식을 ‘구매’ 한 만큼의 주주권을 가진 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주주 사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더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면 기업의 소유도 분산되고 기업의 이익도 넓게 분배되며,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도 조금씩 나뉘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림 1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 비중 변화 추이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약 500만 명 정도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10정도, 경제활동 인구대비로 해도 1/5정도 이외에는 우리 국민은 주식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그림 1 참조) 기업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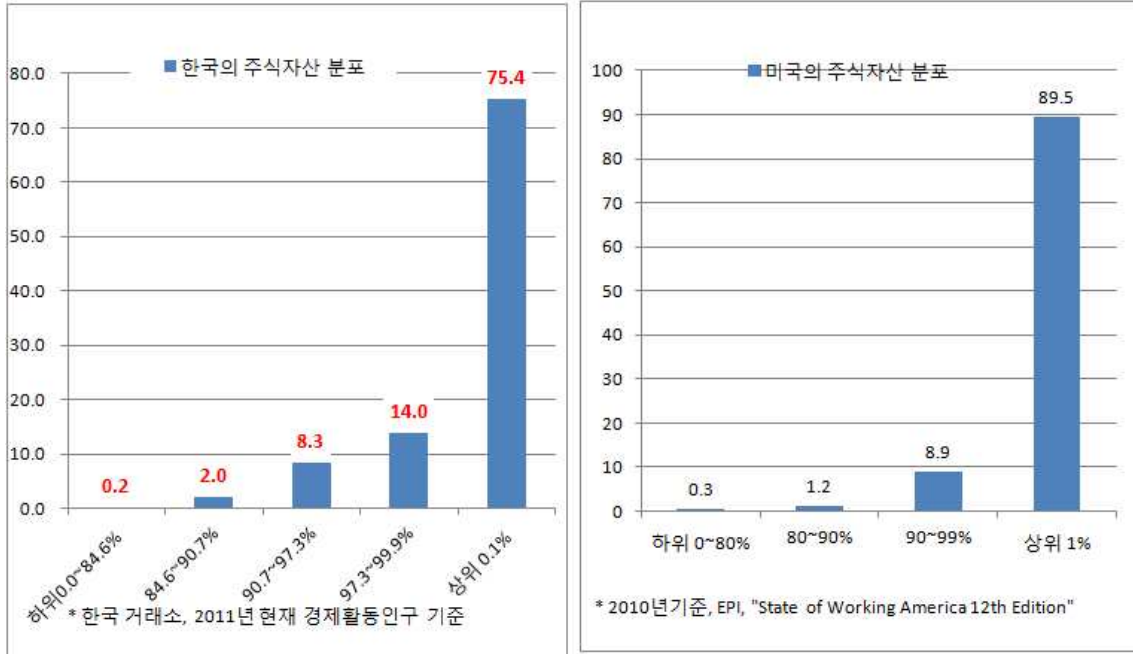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계의 의사결정에 받을 답글 수 있는 원천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림 2 한국과 미국의 주식자산 분포



더욱이 주식 자산은 그 어떤 소득이나 자산보다도 계층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자산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75.4%의 주식은 경제활동 인구 중 상위 0.1%에게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90%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10%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림 2 참조) 이는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자산의 편중 정도는 소득의 편중보다 심한 것은 물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정도보다 심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주식보유로 소득의 부족을 보완시킬 수 있다든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서 이른바 ‘대중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다든지 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

기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경제 민주화

2013년 올해 주주총회를 새삼스럽게 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고 경제 민주화를 제 1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중대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대해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민주화란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는 것임과 동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시에 아무런 힘과 권리가 없는 다수에게 힘과 권한을 확장해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는 한편에서 재벌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을 통제하고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힘과 권한이 없는 다수 국민과 노동자에게 경제 영역에서의 일정한 힘과 권력을 주려는 민주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기업 안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권위자인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통치자와 피 통치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정치체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 내의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도 민주적 절차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서 “만약 국가 통치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기업 통치에서도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종업원들은 대체로 주주만큼은 자신들의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아마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다.²⁾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만 적용되고 진전이 있을 뿐, 기업의 문턱을 전혀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의 생활 대부분을 지배하는 직장으로까지 민주주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재벌 대기업이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거래시장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성도 지키지 않아 각종 독과점과 편법거래, 과도한 하청단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하고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인상조차도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직장에서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시대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그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려면, 기업의 정문으로 들어가서 대다수 직장인들의 생활이 이뤄지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물론 탄생할 때부터 1인 1표의 민주적 원리가 관철되는 협동조합 기업을 기존의 주식회사 밖에 새롭게 만들어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도 있지만 모든 기업을 협동조합 기업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시기

특히 사적 소유의 폐지라고 하는 경제 민주화의 가장 극적인 내용을 포괄했던 사회주의적 구상이 현실과정에서 무력화된 현재 시점에서, 기업 안으로 경제 민주화를 확장시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는 것은 진보적 대안 경제 모색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생산과 소유, 분배에 관한 적극적인 개혁 과제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 1 기업내부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방안 요약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방안	사회경제 체제
- 기업 소유권의 국유화	사회주의
- 노동자 소유와 자주관리	
- 협동조합 기업의 설립과 확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 노동자 기금(wage earner fund)를 통한 노동조합 소유 지분 확대	
- 노동자 감독이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 결정제도 (co-determination, 또는 노동자 이사회 참여)	공유자본주의
-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또는 우리사주제)	(shared capitalism)
- 공적 연기금을 통한 기업 지분 소유와 경영통제	주주자본주의
- 기업 이윤 공유제 (Profit Sharing, 또는 성과 배분제)	(shareholder capitalism)

물론 지난해 경제 민주화 논의과정에서 몇 가지 의제들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먼저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를 들고 나오기도 했으며 대기업에 대한 ‘연기금 주주권 강화’ 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노동자의 사외이사 추천권’ 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진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선출마 준비를 하면서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의제를 발전시키거나 실행에 옮긴 경우는 없다.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당겨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주제도(종업원 주식소유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주장과 노력들이 이어져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 1997년)’ 과 ‘근로자 복지 기본법(2002년)’ 이 제정되기도 했다. 미국 종업원 소유 국가센터(NCEO)에 의하면 최근 종업원 소유 기업에서의 해고 비율이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입증 되는 등, 현재 경제위기 국면에서 종업원소유기업의 고용유지 능력이 주목받기도 한다.³⁾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여 2010년 기준 2800여개 기업정도에 불과한데 전체 기업대비 고작 0.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1970년대부터 종업원지주제(ESOP)가 발전되어온 미국에서조차 이 제도가 “노동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주인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참여 자본주의와 주식소유 민주주의를 실현” 하고자 했지만, 실제 지배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조나 의결권 행사 측면에서 일반 사기업과 아무런 차별성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⁴⁾ 그러나 그 조차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실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 민주화가 절박해진 시대 앞에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공정성과 분배정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기업 수준에서의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모색 역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도 시작해야 한다. 우리사주제도 역시 일부 소수 기업에서의 노동자의 재산형성수단을 넘어서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근로자 복지 기본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 국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대책이자 강력한 고용유지 대책의 하나로써, 노동자의 기업인수 지원을 위한 ‘노동자 인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현재 근로자 복지 기본법 49조에는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만 선언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 등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올해의 주주총회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노동자를 대변할 사외이사가 선임될 개연성도,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개연성도 없다. 그러나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 중요 의사결정의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 주식회사 밖에 태생부터 민주적일 수 있는 협동조합 기업을 만드는 실험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

1) 경제 투데이 2013.3.15일자
2) 로버트 달(Robert A.Dahl)(1985),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A Preface of Economic Democracy)』
3) NCEO(2013), "Employee Ownership and the Costs of Unemployment"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2), 『경제 민주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